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환경공단이 말아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의회 토론회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공적 영역으로 일원화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쓰레기와 처리 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 토론회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의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지난 23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과 재활용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물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 도시 확장 등으로 생활쓰레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물가상승·1인 가구 증가·도시 확장 ... 민간위탁 처리 한계 서비스 향상·예산절감위해 공공관리 영역으로 일원화해야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 실태와 수거·운반 체계 개선 등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광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를 예로 들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광주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원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예산절감 ▲미화원 고용의 안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

동조합 파업 시 광주시 전체 쓰레기수거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은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관리 영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의 제도와 조건에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처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자치구의 체육·문화·복지시설 관리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이에 대해 김동관 광주시 청소행정과장은 “광주환경공단 일원화가 이뤄지면 노사 문제나 예산, 고용,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공단 대행 후 제반 업무는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광주의 생활쓰레기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처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 투시도 (국립생태원 제공)

멸종위기동물 보호 ‘CITES 애니멀샬터’ 착공

국립생태원, 동물복지 개선

국립생태원은 최근 충남 국립생태원 방문자센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 (CITES 애니멀 샬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은 국립생태원 내 부지에 건물면적 2162㎡ 규모로 검역공간·사육공간·전시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보호시설은 ▲편안한 동물 보금자리 (Eco Nest) ▲신재생에너지 활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설계이념을 적용했다.

생태원은 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밀수·밀거래 과정에서 고통받던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 편안한 공간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밀수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안 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24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등산·지리산 등 설경명소 큰 눈 와도 탐방로 개방한다

무등산 설경

국립공원공단 전국 62개 구간 지정 ... 위험요소 발생 뎀 즉시 통제·대피조치

눈이 많이 오더라도 무등산 토끼등과 지리산 노고단 등에 올라 설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전면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설경명소 62개 구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다만 대설경보 때로 격상되거나, 현장에서 폭설·한파 등 위험요소 발생시 즉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조

치할 예정이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했다.

올해 개방하는 구간은 지난해 개방했던 지리산 뱀사골계곡(반선-오룡대) 등 39개 구간을 포함해 탐방객이 많이 찾는 설악산 백담계곡(수렴동대피소 일원) 등 23개 구간을 새로 지정했다.

무등산의 경우 증심교-외재미술관-약사사(2km), 오감연결길-배등골(800m) 구간과 올해 추가된 원효광장-늦재삼거리-바람재-토끼등(2.3km) 구간이 개방된다. 월출산은 구름다리 구간(1.4km)이 지리산은 성삼재-노고단 정상(5.4km), 화엄사-연기암(3.9km) 구간이 개방된

다.

23개 신규 개방 구간에는 지리산 구룡삼곡-구룡폭포, 경주 불국사 탐방지원센터-석굴암 공원지킴터, 한려해상 이따사입구-절망대, 설악산 장수대분소-대승폭포 등이 포함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많은 탐방객이 감상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기상상황으로 갑작스런 통제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개방 여부 등을 확인해 탐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온실가스 못줄인 기업, 부담 커진다

정부 녹색성장위, 배출권 유상할당 10%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2021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감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입구-절망대, 설악산 장수대분소-대승폭포 등이 포함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많은 탐방객이 감상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기상상황으로 갑작스런 통제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개방 여부 등을 확인해 탐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을 설정하고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 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 시장 연계·협력력 4대 중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출 허용 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상 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2차 계획 기간에 적용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를 3차 기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 할당 비중이 축소되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 능력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들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제도를 확대하고 시장 내 파생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제에 맞는 국제 협력 체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